

文, 檢 수사에도 임명 관철... 여권-검찰 ‘전면전 양상’

‘강제수사’ 檢에 사실상 경고장
민주당 “대통령 임명 대한 도전”
검찰개혁 고삐 의지 ‘적극 표명’

검찰, 사모펀드 관련자 구속 수사
윤석열, 고강도 수사 밀어붙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임명을 관철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인사 방해’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의 경고장은 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가 지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언급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고유권한으로 조 장관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경고장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검찰은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조 장관 부인)를 지난 6일 전격 기소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사례도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 검찰을 향해 고강도 경고를 날린 게 이를 방증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관련) 한 두 마디만 하겠다”며 “검찰은 수사하고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 즉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 시간에 관여되지 않길 바란다. 이것이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여론몰이식으로 수사하는 검찰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피의사실 유포가 있어선 안 된다. 검찰이 국민 위에 있지 않은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인사청문회 기간 중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검찰의 부당한 정치개입이

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전격 임명한 것은 현재의 검찰 수사가 장관 임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검찰 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도 이번 수사를 두고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오히려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스타일로 미뤄볼 때 조 장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수사 강도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던질 각오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강행한 날,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관련업체 대표들을 나란히 구속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수사는 서서히 조 장관 가족들을 향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조 장관과 조 장관 가족들의 위법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사법개혁 기대” vs “민주주의 후퇴”

〈민주당〉

〈한국당〉

여야 대치 벼랑 끝으로

與, 검찰개혁·국민 설득 방점
野, 특검·해임 건의안 등 모색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나서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은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 갈등·분열도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야는 일제히 여론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개혁과 탈검찰의 법무 행정은 그것대로 장관이 책임 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조 장관과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여권의 검찰 압

박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 후 곧바로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현재 정기국회 보이콧(불참)과 조 신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결국 문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보고, 범야권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질타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의사일정과 연계해 투쟁할 생각은 없다”며 “국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특별검사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도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에선 이승한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검찰의 (조 장관) 부인 기소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사회 구현과도 맞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서대성 기자 bigstar@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속엔
정관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추석엔 마음을 주세요

행사기간 : 08.23~09.16

- 1 선물용 제품 10% 할인 (일부품목에 한함)
- 2 신규멤버스 가입 후 첫 구매시 알파프로젝트 '혈행건강' 증정 (단, SMS정보수신동의 및 5만원 이상 결제에 한함)
- 3 홍삼정에브리타임 30/50포 구매시 3/5포 추가증정
- 4 KB/롯데카드 청구할인행사
15/30/45/60/75/90만원이상 결제시 1/2/3/4/5/6만원 청구할인 (단, 법인/체크/기프트카드 제외, 1인 1회에 한함)
- 5 100~300만원 결제시 3% 포인트 추가적립
300만원 이상 결제시 5% 포인트 추가적립

• 적용매장 : 가맹점, 직영점

당신께만큼은
정관장